

한국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특정 시기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한국인은 1919년 3월을 꼽지 않을까 한다.

1919년 3월의 ‘우리’는 칠혹 같은 어둠의 시기에 너무도 밝게 빛났던 한 줄기 빛을 만들어냈다.

그 빛은 이후로도 꺼지지 않고 이어져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그 빛을 영원히 꺼트리지 않기 위해

‘헌법’이라는 이름 안에 가둬 보호하고 있다. 대체 그 빛은 어떻게 만들어졌던 것일까?

글. 김재원(작가)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강사
- 팟캐스트 ‘역사공작단’ 패널

1919년 3월, 그날의

뜨거웠던 합성 속으로

전국에서 울려 퍼진 ‘조선 독립 만세’

1910년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제병합하고 조선을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매우 강력한 통치를 시작한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의 통치 기간을 흔히 ‘무단통치’ 시기로 부른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는 헌병을 통해 치안을 유지하고,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를 모두 박탈한다. 특히 헌병경찰제도는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 헌병이 일선 경찰의 업무를 맡도록 한 제도인데, 일상적인 상황을 전시상황으로 간주해 군인이 치안을 유지했던 공포정치 체제였다. 학교의 교사들은 금테를 두른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교단에 섰다.

설상가상으로 경제 상황까지 ‘악화일로’를 걸었다. 농촌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물가 상승률은 치솟기 시작했다.

1918년 일본의 기록적인 흉년은 조선에서의 쌀 공출을 급격히 늘렸고, 농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게다가 1918년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고, 조선총독부는 방역 실패에 실패한다. 조선에서만 십수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된 거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방역 실패의 책임을 조선인의 생활 습관 탓으로 돌렸고, 결과적으로 조선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된다. 조선인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한껏 높아졌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와중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의 윌슨(Wilson, T. W.)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발표하며 전 세계 식민지 민족의 심장에 불꽃을 일으켰다.

물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독일·오스트리아·터키 등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된 것이었으나, 원칙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피압박 민족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조선인도 마찬가지였다. 독립운동가들은 민족자결주의 발표 이후 조선의 독립을 전 세계에 호소하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재미교포, 재일본 조선유학생, 중국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 등 해외의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거대한 움직임은 국내의 종교계를 포함한 각 사회지도층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거족적’인 민족독립운동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1919년 2월 8일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2·8독립선언’ 이후,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죽자 국내에서도 고종 장례식에 맞춰 독립선언을 외칠 것을 결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결의 한 날짜가 바로 1919년 3월 1일. 이날에 맞춰 민족 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탑골 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만세 운동을 시작했다.

민족의 소리가 하나의 정부로 완성되다

천도교와 기독교 등의 종교조직 덕분에 3·1운동은 전국적인 저항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거세지자 일제는 운동이 벌어진 지역에 군대를 파견했다. 헌병과 경찰뿐 아니라 완전무장한 2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전국에 분산시켰던 것이다. 이후 시위대를 향한 대량 학살과 피검자에 대한 무자비한 고문을 이어갔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만세운동을 종식시키려 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다.

3·1운동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당장에 독립은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1운동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한국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했고,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은 조선총독부에도 커다란 충격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0년 동안 펼친 그들의 지배방식이 저항만을 키웠으며 더이상 무단통치로 일궈져는 무력적 방식에 의한 조선인 지배로는 식민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총독부는 무단통치의 상징이었던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조선인의 관리 임용 및 대우 개선을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조선인 언론의 허용으로 상징되는 언론·출판·집회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를 시행한다는 시정방침을 발표하게 되었다.

大
韓
獨
立
萬
歲